

제목 : < 노동정책의 방향전환을 위한 새로운 시도 > 발표 내용

- ◆ 우리 연구원에서는 「노동정책의 방향전환을 위한 새로운 시도」와 관련한 개원 20주년 기념 토론회를 9월 22일 오후 2시 대 한상공회의소(중회의실 A)에서 개최합니다.

[발제문 요약]

- 현재의 한국경제 상황에서 노동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.
- 성장동력 확충과 함께 생산물시장의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의 인적·물적자본에 대한 개방화를 적극 추구하는 한편, 노동정책에 관한 정부내 부처간 횡적 조정기능을 강화하고(핀란드 사례 참조)
- 취업알선, 헤드헌팅, 인력파견·용역, 전직지원(Outplacement), 취업정보, 취업상담, 외국인력 중개, 취업준비, 기업의 인사관리 대행 등을 활동영역으로 하는 勞融산업(인적자본산업)이 활성화되고 대형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, 직업안정법, 근로자파견법 등의 규범을 합리화하며
- 80~100개의 지역단위에서 일자리 생성과 소멸에 관한 통계를 공표하고 성과에 연동하여 고용보조금 등을 운영함으로써 지역파트너쉽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제고되는 환경을 조성

- 고용문제의 근인은 지난 30년간 성장축이 지속적으로 변화 창출되어 왔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있음.
-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축이 존재할 때 고용정책은 노동공급 측면에만 주목에도 무방했지만
-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경제정책-고용정책의 긴밀한 조율과 노사관계를 포함한 노동정책의 핵심을 경제 전반의 고용문제와 일자리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임박한 과제
- 일자리 공급을 결정하는 노동수요는 생산물 시장의 파생수요이고 노사관계 또한 생산물시장에 의해 규정받음
- 생산물시장, 즉 산업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정책이 가능하도록 제반 규범을 정비하는 한편 경제-노동정책 연계구조를 정비하여 발생가능성이 있는 노동문제의 사전적 조율 능력 일자리 창출 능력을 확충해야 함.

※ 붙임 : 발표자료 원문



1. 노동정책의 부처간 횡적 협조·조정체계 강화 및 개방화 추진

- 생산물시장 동향에 근거하여 노동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노동정책에 관한 부처간 횡적 업무조정 역량 강화
- 노동정책에 관해 정부부처간 횡적 업무조정 체계를 확립하여 주무장관의 예산제안 권한 등을 증진

※ 핀란드는 다수 부처가 관련된 업무의 횡적 협조·조정을 위해 정부정책 프로그램(Government Policy Program: GPC)이라는 명칭하에 고용정책, 기업정책, 정보사회정책, 시민참여정책을 횡적 업무협조를 추구하는 정책(horizontal work)으로 채택·운용

- 생산물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개방화를 추구하고 국제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, 국제경쟁력을 가진 인적자본이 양성되도록 산업 및 교육환경을 개선
- 이를 위해 외국의 인적·물적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양자간·지역

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개방화를 적극 추구

2. 노용(勞融)산업의 성장기반 조성

○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물적자본을 매개하는 금융산업과 마찬가지로 인적자본을 매개하는 경제활동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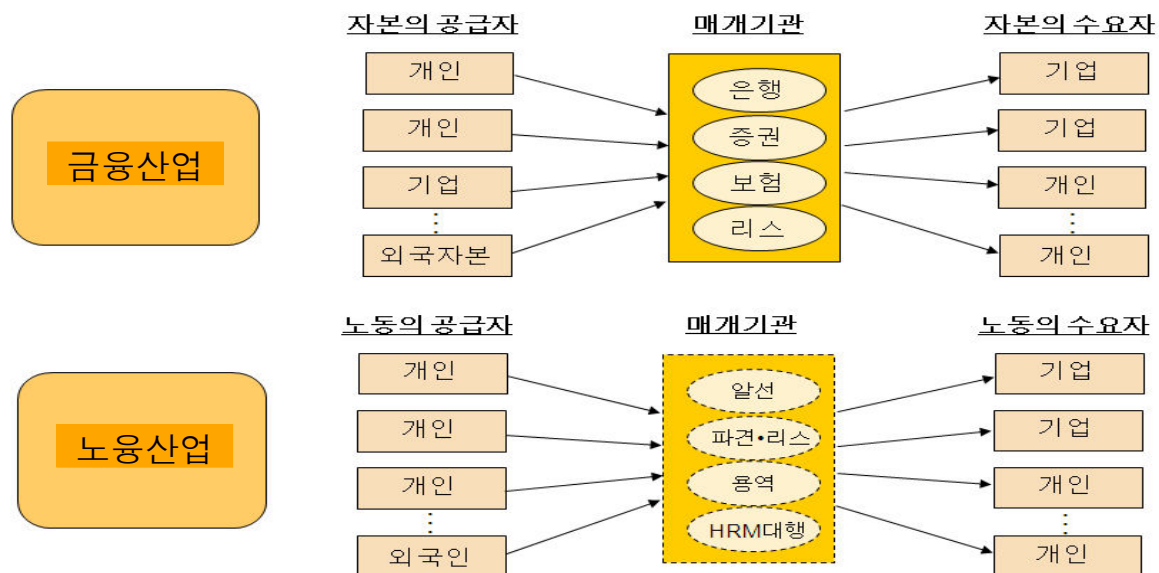
- 한국의 고용서비스 시장규모는 미국과 비교할 때 1/59에 불과할 정도로 산업화가 지체되어 있음

※ 금융산업은 한국이 미국의 1/14 규모

※ 미국 내에는 임금지급, 산재보험 처리, 인사관리, 임금외급여(employee benefit)관리 등을 대행하는 Professional Employer Organization(PEO)가 700여개 존재하고 동부문에 200~300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(2007년), 스웨덴, 독일, 영국, 러시아에서도 활성화되어 있음(Nyström, 2005; Shären, 2005).

- 노용(勞融)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성장영역을 개척하는 한편,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동생산성 제고할 필요

[그림] 금융산업과 노용(勞融)산업의 구조 대비



자료 : 박기성(2008).

○ 민간 노용(勞融)기업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현재 고용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규제와 감독을 시행하고 있는 근로기준법, 직업안정법, 파견근로

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정비

- 불공정 노동계약, 사회보험 가입누락 등의 문제는 강력한 사후감독으로 규제하고, 알선요금 노용(勞融)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성하여 산업화의 가능성을 제고

3. 지역파트너십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

- 중앙정부는 지역단위의 노동시장 성과정보 공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파트너십 협의체가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일자리 창출, 노사관계 발전, 인적자본 축적 등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
 - 서울 등 대도시는 수 개의 구를 묶어서, 인구가 적은 군은 인접 군들을 묶어서 전국적으로 80~100개 안팎의 자치단위로 구분하고 노동부는 노동시장 성과지표를 발표

※ 프랑스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 내에서 업종별로 취업가능한 수, 현재 취업해 있는 사람수, 구직자수, 직업별 일자리수, 직업별 지원자격, 그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지역내 인력공급규모, 그 중 외부지역으로 나간 사람의 수, 현재 그 기준을 충족시키고 해당 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의 수에 대한 인력수급 테이블을 제공.

- 지자체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성과 제고를 위해 노·사·민·정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·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지역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노사관계가 기업수준을 넘어 지역단위에서 일자리 창출을 추진
- 지역고용지원센터는 지역의 고용 및 임금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파트너십 협의체의 구심점으로 역할하면서 지역수준에서 노용(勞融)산업 육성 역할도 수행
 - 지역파트너십과 고용서비스에서 민간 노용(勞融)기업 협력자이자 노용(勞融)기업간 경쟁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

- ※ 상당수 선진국들에서는 공공·민간의 노동시장 매개기관(public and private labor market intermediary)의 협력 및 경쟁을 강화
- 미국은 1998년 제정된 인력투자법(Workforce Investment Act)에 의해 지역별 인력투자위원회(workforce investment board)를 구성했는데, 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참여자이자 지원군이 이들 매개기관들임(Eberts, 2008; Giloth, 2004).
 - 덴마크의 경우 고용센터가 지역파트너십 협의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며(Hendeliowitz, 2008),